

 **“구제역 공기 전파 가능성 희박”**

방역당국, 이천 양성돈사 내 공기서 바이러스 채취
“있을 수 있지만 바람 타고 이동 쉽지 않아” 일축

공기에서 구제역 바이러스를 채취하기는 했지만, 공기를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방역당국 진단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월 31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구제역 양성으로 확인된 양돈장 2곳을 대상으로 돈사, 환풍기, 돈사입구, 돈사밖 10m, 50m, 100m 등에서 공기를 채취해 구제역 바이러스 존재여부를 확인했다. 검사결과, 모돈사 1곳에서 구제역 바이러스를 검출했다. 이를 두고, 주이석 검역원 질병방역부장은 “양성 돈사내 공기에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외 공기에서는 바이러스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공기전파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파되려면,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살살 불어야 한다. 그리고 습도가 60%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 건조한 데다 환경적으로 언덕이나 산이 많아 바이러스의 이동이 어렵다. 바람도 세게 불어 바이러스 농도를 흩어버리게 한다”며 공기전파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하지만, 지난 6일 가축관리담당자들이 연금생활을 해 온 충남 천안의 국립축산과학원 산하 축산자원개발부에서까지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공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 2월 9일

 **종오리, 산란율 급격 저하...닭, 일령 무관 폐사율 높아**

+ 육용오리 25~40일령서 발생

2010~2011 HPAI 발생현황

지난해 12월 29일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양성이 확인된 이후 올해 2월 6일까지 5개 시도에서 총 40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오리 28건(육용 20건, 종오리 8건), 메추리·꿩 각각 1건, 닭 10건(산란계 5건, 종계 3



건, 육계 1건, 토종닭 1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21건, 경기 11건, 충남 5건, 전북 2건, 경북 1건 등이다. 이번 HPAI는 감염된 축종에 따라 임상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종오리의 경우, 폐사는 거의 없지만, 급격한 산란율 저하를 보였다. 육용오리는 주로 25~40일령에서 발생해 높은 폐사율을 나타냈다. 닭에서는 일령에 관계없이 폐사율이 매우 높았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 2월 9일

구제역 백신 자체생산 타진...전문가 구성 TF팀 회의에선

+ “해볼 만하다”!...투자비용 놓고는 ?

기술력 부재 막대한 시설·인력 부담
“연구는 국가가, 생산은 업체가” 제안

“아는 게 없다. 백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구제역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앞으로 수많은 걸림돌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약품 업계, 건설업계, 학계 자문단 등으로 꾸려진 ‘구제역 백신 국내 생산을 위한 TF팀’은 지난달 26일 1차 회의에 이어 31일 2차 회의를 갖고, 구제역 백신 국내 생산을 두고, 여건과 현황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구제역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기술력이라든가, 설비, 투자비용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는 수준에서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물약품 업계의 경우, 연구시설에 투자하기는 무리라고 판단, “연구는 국가기관이, 생산은 민간업체”라는 제안을 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그나마도 백신생산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에 윤곽을 잡지 못한 채 다만, “해볼 만하다”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살처분 정책을 고수해 구제역 백신을 생산할 만한 시설이 없고, 개발인력과 기술력도 전무하기 때문이다. TF팀은 앞으로도 수차례 더 회의를 열어 해외사례 등 자료를 모으는 한편, 국내 생산방안 등을 놓고, 여러각도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한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는 “백신정책으로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매망을 갖춰졌다고는 할 수 없다. 수십억원 설비와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구제역 백신생산에 선뜻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영길(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 2월 7일

 **구제역 백신 조달 ‘숨통’**

+ 해외백신업체 2곳서 1천9백만두분 추가 확보

총 3천1백만두분...1~2차접종 수요 대응 무난

구제역 백신 조달에 숨통이 트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 1,200만두 물량 외에 1,900만두 물량의 구제역 백신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1900만두 물량 역시 메리알사와 인터베트사로부터 들어오게 된다. 메리알이 1,200만두, 인터베트가 700만두를 공급기로 돼 있다. 이들 백신은 매주 50~200만두씩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3월 6일경에는 공급이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로써 이번 구제역 백신에 우선 쓰이는 백신은 총 3,100만두 물량. 기존 1,200만두 물량에는 보관 30만두, 항원뱅크 생산 120만두, 메리알사 550만두, 인터베트사 500만두 등이 포함돼 있다. 백신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공급차질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방역당국 노력과 업계 협조를 통해 난제를 해결한 셈이다. 하지만 1, 2차 접종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새로 태어난 가축에 대한 접종과 정책에 따라 6개월 후 보강접종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백신조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백신공급 회사측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 공급될 백신을 한국에 우선 배정기로 했다. 또한 백신생산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미래수요에도 무난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 2월 1일

 **방역 전문성 강화 교육 시스템 구축을**

+ 국회 ‘구제역·시 대책마련 정책토론회’에선

농가와 방역요원에 대한 질병교육이 구제역 향후 대책방안으로 제시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이 공동주관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구제역 유입과 확산 이유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 “방역체계 획기적 개선없이 축산미래 없다” 한목소리
- 전문교육기관 설치·합동 긴급동원 시스템 마련 촉구
- 수의사·컨설턴트 ‘할당제’...군병력 활용방안 제안도

김재홍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방역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방역조직 강화, 농가와 방역요원의 정기적인 교육, 중앙정부 차원의 기동방역단 편성 등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이번 구제역에서는 방역요원이 항체키트만으로 음성이라고 판단해 초동방역이 실시되기도 전에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방역요원에 대한 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현장 방역기술을 가르치는 전문 교육기관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봉균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축산인 방역위생 훈련원’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이 소정교육을 받아야만 축산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기간은 일정기간 현장과 격리하고, 농가들이 직접 고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수의전문가, 행정, 인력, 장비, 재정 등으로 꾸러진 긴급자원동원 시스템을 마련해 구제역 발생 시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10개 수의과대 재학생들이 매 학기 종료 후 일정기간 산업동물관련 기본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유용 서울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는 “수의사, 컨설턴트 등이 지역 또는 농장을 정해서 활동토록 하는 ‘할당제’가 요구된다. 사료회사 역시 규모, 역량, 특성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특화하면, 질병방역과 축산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농식품부내 축산국 조직강화와 더불어 군병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이 앞으로 모색돼야 한다. 또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검역과 방역조직 전문화가 실현돼야 한다. 또한 축협 기능을 높여서 축산재활과 선진모델 도입에 힘써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 1월 28일

* 이날 토론회 화두는

청중들 "청정국 지위 왜 고집하나" 의문 제기
전문가 "수입 막는 방패, 백신청정국 매진해야"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구제역 청정국'이라는 단어가 핵심키워드로 떠올랐다. 그리고 백신을 무기로 해서 청정국 지위 획득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꾸 제기됐다.

청중에서는 "축산물 수출이 기껏해야 연 28억원에 불과하다. 수출 때문에 청정국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왜 청정국을 고집하는가. 구제역 상재국이면 어떠한 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이는 "2조원이 넘게 살처분 보상금으로 국민세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돈을 퍼부어가면서까지 청정국 지위가 되면 무엇이 나온가"라고 물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하지만, 축산과 수의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구제역 청정국은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도 안되는 축산산업이 가야 할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중복 건국대 수의대 교수는 "구제역이라는 질병은 수조원을 빼앗아가기도 하지만, 돈을 벌어서 주는 일종의 무역장벽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중국이 축산물을 수출하려 한다면, 우리나라는 '비청정국'을 이유로, WTO의 동등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수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홍 서울대 교수는 "선진국치고 구제역 청정국이 아닌 나라는 없다. 구제역 청정화 포기는 국제회의, 국제무역, 관광산업 등에서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유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살처분과 백신청정화를 두고, 이중복 교수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배출량이 많고, 전파가 빠르기 때문에 청정화를 이루려면, 살처분 정책을 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비육돈에 백신을 접종한 만큼 이제 상재화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며 백신을 통해서라도 청정화를 일궈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교수는 "백신접종을 하면서도 2년간 발생이 없고, 최근 1년간 구제역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획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동대응 미흡 뼈저린 댓가...원발지 미야자키현 봉쇄

+ 해외 구제역 방역조치/ (4)능장대응으로 화 키운 일본

지난해 상반기 구제역이 일본 섬나라를 덮쳤다. 4월부터 7월까지 세달간 일본 축산산업을 흔들었다.

3월 25일 미야자키현에서 구제역 첫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당국이 이를 묵살한 것이 확산단초를 제공했다. 2차 신고가 접수된 4월 9일에서야 조사에 들어갔고, 4월 20일 양성 확진판정을 내렸다.

신고 묵살 한달간 방역 공백...28만8천여두 매몰 5천억 피해
 방역대 10km부터 백신 후 살처분...청정국 지위 회복 눈앞



결국, 한달 사이 방역공백이 생겼다.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미야자키현에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퍼져버렸다. 초동대응 미흡이 화를 키웠다. 이후 7월 5일까지 미야자키현에서 총 292건이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군 274건, 사이토시 8건, 에비노시 4건, 미야자키시 3건, 기타 3건 등이다. 감염 또는 의심동물은 21만1천608두에 달했다. 이중 돼지는 17만4천132두였고, 소는 3만7천412두, 물소 42두, 염소 14두, 양 8두 등이었다. 이 가족들은 살처분 조치됐다. 보상액은 월령, 혈통, 능력, 품종 등 고려해서 결정됐다. 일본 방역당국은 처음에는 발생농장만 살처분을 했다. 하지만,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고, 구제역은 확산기미를 보였다. 어쩔 수 없이 백신카드를 꺼냈다. 일본의 '구제역 방역 실시요령'에서는 이동제한만으로 확산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예방접종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백신접종축은 모두 '살처분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백신접종은 5월 22일 시작해서 26일까지 4일만에 끝냈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10km를 반경으로 했다. 백신접종 후 살처분된 가축은 소 4만5천944두, 돼지 7만9천606두, 기타 118두 등 총 12만5천668두였다. 이 중에는 감염의심 4만8천796두가 포함돼 있다. 결국, 일본에서는 감염의심 21만1천608두, 예방접종 7만6천872두 등 28만8천480두가 매몰살처분됐다. 피해액은 350억엔(5천억원)으로 불어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발생농가에서는 살처분 정책을 유지했고, 방역대(10km)에서부터는 백신 후 살처분 정책을 썼다. 일본 방역당국은 7월 27일, 살처분과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구제역은 미야자키현에서 마무리됐다. 일본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청정국 지위 회복을 선택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백신접종을 하고, 접종 축 살처분이 3개월 경과하면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2011년 2~3월경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끝>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 1월 28일



중국산 가축안락사약품 '이상 無'

✦ 동약연, 시험결과 유효성분 기준함량 적절 평가

최근 도마 위에 올랐던 중국산 석시닐콜린 완제품이 유효성분 시험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구제역 감염 가축의 매몰처분을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인 석시닐콜린의 국내 물량이 부족하자 방역당국은 중국에서 5만두분의 석시닐콜린 완제품을 긴급 수입했다.

지난 9일 국내에 들어온 중국산 석시닐콜린은 경기, 강원, 충청지역 구제역 가축 매몰현장에 공수됐

고 사용 후 현장에서 기존 국산 제품에 비해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는 항의와 함께 제품 유효성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나 동물약품기술연구원(원장 곽형근, 이하 동약연)의 유효성분 함량시험 결과 지난 9일 수입된 석시닐콜린 제품은 유효성분인 염화석사메토늄이 1ml당 49.37mg(1ml당 50mg이 기준)으로 98.74%의 성적으로 나타나 95.0%~105.0%로 제한된 허용기준을 충족했다. 동약연 관계자에 따르면 수입된 중국산 석시닐콜린 제품의 경우 약품 유효성분은 이상이 없지만 국산제품과 부형제가 틀려 제품의 효능이 다소 늦게 나타난다는 것. 실제로 기존 국산 제품((주)일성신약)의 경우 수성의 성질을 가진 소듐아세테이트를 부형제로 사용했다. 소듐아세테이트는 주로 정맥주사용으로 희석이 잘되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지만 지속성 및 유통기한이 짧으며 겨울철 현장에서 쉽게 얼어버리는 등의 단점이 있다. 반면 중국산 제품(상하이 푸동제약)의 경우 유성의 성질을 가진 플로필렌 글리콜을 부형제로 사용했다. 플로필렌 글리콜(피지)은 정맥과 근육에 병행해 사용할 수 있지만 주로 근육 주사용으로 사용된다. 플로필렌 글리콜은 성분 특성상 유통기한이 길며 겨울철 현장에서 잘 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점성이 강해 주사를 놓기가 힘들고 효능이 나타나는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동약연 관계자는 “주사제의 경우 부형제의 차이로 인해 효능이 늦게 나타나는 등의 사례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유효성분의 함량이 적절하다면 제품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원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1년 1월 21일

 정영채 대한수의사회장



“지금은 글로벌시대 축산업 경영 대전환 · 대수술 필요”

본지가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진행 중인 연두 릴레이 인터뷰 ‘우리축산업의 길을 묻다’에서 정영채 대한수의사회장은 약성가축전염병과 FTA 등의 요소들이 축산업을 위협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축산업 기반은 무너지서는 안되며 후손에게 물려줄 축산업을 반드시 사수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는 제2국방인 방역의 재무장과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 구제역 등 전염성이 강한 질병 발생이 빈번해지는 배경과 원인은 무엇이고, 갈수록 심대해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또 우선해야 할 과제들로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되며 세계가 1일 생활권으로 좁혀지면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되고 있다. 이는 바이러스도 그만큼 유입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악성가축전염병 상재 국가와 인접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밀집·밀사도 큰 문제다. 단시간 생산 출하로 수익성을 확보키 위해 1970년대 이후부터 추진된 증산정책은 밀집사육을 초래했고 이는 가축의 면역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설치류 및 곤충 등은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중요 원인으로 외국과 같이 이들 매개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구제역이 바람에 의한 공기 전염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구제역을 비롯한 모든 바이러스는 습도, 온도, 시간 등의 생존 환경이 적절해야 하며 반드시 매개체를 통해 전염되는 특징을 가진다. 때문에 매개체의 관리가 중요하다. 분산 입식 및 출하도 문제가 되는 만큼 이를 급하고 반드시 올-인 올-아웃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별 여건에 따라 구제역에 대처하는 방안이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살처분을 원칙으로 백신을 마지막 수단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마치 백신정책이 우리 축산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생각으로 반대하는 여론들이 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미흡하고 아쉬운 생각이 들겠지만 현재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백신 정책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장기적으로는 축산발전과 방역체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수요가 아닌 국토 면적에 맞는 시설 및 적정사육두수(양돈 650만두)의 사육, 농가와 축사의 분산, 사료·약품·사람의 격리 소독시설 설치, 주거지역과 축사의 분리 등의 방안이 적극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자가 방역에 철저히 기해야 할 것이다.

- 정부와 중앙재난대책본부는 구제역 미발생지역의 유입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백신 전국 접종'의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후유증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문제일까요.

▲전국백신 정책이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지만 완전한 선제는 아니다. 마지막 조치로서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본다.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백신 외에는 대안이 없다.

백신정책 즉 예방접종은 인체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100% 효과는 없다.

이번 구제역 백신도 대략 80~85%의 면역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구제역 현장에서는 90%에 가까운 가축들이 면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고 설명할 수 있다.

같은 백신을 투여하더라도 환경 및 가축의 상태(영양, 스트레스 등)에 따라 면역 형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근육 또는 정맥 등 주사 위치 및 주사 용량 등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일부는 면역형성이 안되거나 사망할 수도 있지만 다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백신을 선택한 것은 올바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느 정도의 후유증이 두려워서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모든 가축들이 살처분 대상이 됐을 것이다. 이번 구제역 백신 투여로 얼마만큼의 후유증이 나타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방역대 설치를 통해 이미 감염된 가축과 미감염 가축을 철저히 분리 후 백신을 투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번 사태로 축산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하필 한미 FTA와 한EU FTA 확대 추진이 예상돼 국내 축산업의 존립 우려가 팽배해 지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두 FTA가 발효되면 우리 축산업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축산업이 위축되며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분명하다. 아무래도 농업이 목축업으로 시작된 축산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경종으로 시작된 우리나라는 뒤떨어 질 수밖에 없다. 축산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겠지만 우리 축산업이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축산업(축산식품)은 이미 국민식량으로 영양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을 유지해야 한다.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을 마련해 놓지 않는다면 외국과의 식량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난 1970년대 말 호주산 쇠고기가 수입되었던 때를 떠올려 보자.

당시 저렴한 가격의 호주산 쇠고기가 수입되자 국내의 소사육기반이 무너졌고 이에 호주에서는 소고기 가격을 두 배로 올린 적이 있었다. 이렇듯 기본적인 적정 사육기반이 무너지면 ‘눈 뜨고 당하는 꼴’이 되고 만다. FTA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정부는 축산업 기반 유지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국토보존(사막화 방지) 및 국민생활환경유지보존을 위해서도 축산업의 적정사육기반은 필수적이다.

- 검역 및 방역체계의 재무장에 대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검역 및 방역 시스템에 등에 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검역이나 방역 체계가 나쁘지 만은 않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재무장의 필요성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검역 및 방역과 관련된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간 1050만명이 드나드는 시드니 국제공항에는 검역관이 285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



만 연간 3300만명이 드나드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30여명에 불과한 검역관이 근무를 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도 전체 4500여명의 수의사 중 2/3인 3000여 명이 공무원으로 근무할 만큼 검역·방역, 식품위생업무에 비중을 두고 있다. 향후 관련 인력의 충원이 시급히 진행돼야 할 것이다. 방역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제2의 국방이라는 말이 있다. 제2의 국방은 인류가 살아가는 한 끝이 없을 것이다.

진정 제2의 국방이라면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현 상황을 수습해야하며 국가방역체계가 우리 축산업의 규모와 분포에 맞게 확립돼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자체로 이양돼있는 방역 의무와 책임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방역도 제1의 국방처럼 육·해·공 또는 특수부대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동물·식물·수산 통합 검역청을 만든다고 한다. 이전부터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언급되던 ‘검역청’은 이번 구제역 사태가 종식되면 또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어떠한 형식으로 증설될지도 중요하다. 과연 통합 형식의 ‘검역청’이 실효성이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된다. 또 하나 생각해볼 문제는 소위 ‘윗분들의 질병현장 방문’이다.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했다하면 윗분들은 현장을 방문해 온갖 유세를 띤다.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방역에 매진해야할 인력들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본인의 유세를 위해 질병방역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삼가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광역단위의 축종별 진료소 형식의 거점센터를 만드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거점센터를 통해 가족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책임제로 관리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설 연휴기간이 향후 구제역과 고병원성 AI확산의 중대고비가 될 것을 직시해야하며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확산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전국 도처에서 구제역과 AI 방역과 확산 차단에 진력을 다하며 눈에 띄지 않는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의사를 비롯해 일선의 축산, 수의직 공무원, 축산농가, 관련 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격려 및 당부 말씀을 인터뷰 지면을 통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의 눈을 쳐다보면 그 선량한 눈동자에 마음이 맑아지곤 했다. 동물이 좋아 그들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수의직에 몸담았다.

동물들의 병을 치료하는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수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수행하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가축들에게 죄책감을 가진다. 죄책감과 미안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에 눈물이 나고 잠을 설칠 때가 많다.

구제역 소식이 전해지고 그 현장을 떠올리면 가슴이 저리고 아프다.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 같은 가축을 잃고 상실감에 빠져있는 수많은 축산 농가들이 좌절하지 않고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코뿌리가 빠지고 손과 발이 얼어붙는 혹한의 날씨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분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하루 빨리 구제역과 AI가 종식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박정원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1년 1월 21일



‘한국 수의학사’ 발간

+ 검역원, 전자책 병행 제작 일반인에 제공



▶ 한국 수의학사 책자 표지.

고대 수의학 태동기부터 근대기(~1962년)까지의 한국 수의역사를 시대별, 사건별로 조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수의학사’ 책자가 출판됐다.

‘한국 수의학사’는 원로 수의사인 이시영 선생(전 한국마사회 마필보건소장)의 집필 원고를 근간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편집 및 교정 작업을 거쳐 탄생했다.

고대 수의학의 태동부터 시대별, 사건별로 기술한 ‘한국 수의학사’는 제1장 고대부터 통일신라까지 수의학 발달과정을 시작으로 제6장 해방 이후의 수의업무 변천과정 등 총 6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역사적 기록 등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검역원 관계자는 “향후 미진한 부분이나, 동물약품, 실험동물 분야 등 이번에 언급되지 못한 분야와 함께 1962년 이후 현대 수의학에 대한 기록도 꾸준히 수집·관리하여 추가 출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수의학사’는 유관기관에 750부 배부됐으며 검역원 수의과학도서관에서 전자책(<http://ebook.nvrqs.go.kr>)으로도 일반에게 제공하고 있다.

박정원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1년 1월 14일



이용희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수의사회 의무가입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이용희 국회의원(자유선진당, 충북 보은·옥천·영동)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이용희 의원은 지난달 28일 그동안 자율에 맡겨졌던 수의사들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대한수의사회에 취업상황 등 실태보고를 의무화해 비상시 방역동원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가축 방역의 최전선을 담당할 수의사에 대한 인력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어서 수의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등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득과 동시에 협회에 자동적으로 가입돼 각 협회의 정관에 따라 매년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협회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1만 5000명에 달하는 수의사는 대한수의사회 가입이 의무적이지 않아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현황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국가 방역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의사로 하여금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수의사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강제 조항으로 변경해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용희 의원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끊이지 않는 데는 수의사 등 전문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소홀이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며 “수의사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방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경기자(nirvana@afnews.co.kr)
농수축산신문/2011년 1월 31일